

한반도 평화정착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화

김 부 찬*

I. 서 론

21세기는 국제화/세계화/지방화의 시대이다. 일반적으로 '국제화'가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구성원들간의 대외 교류의 증대 내지는 상호협력의 심화를 지칭한다면, '세계화'는 교류·협력의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는 대신 지방과,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고도로 발달된 교통·통신·기술 혁명에 따라 금융·생산·유통·정보·문화·환경·안보 등 다방면에 걸친 탈영토적·범지구적 차원의 복잡한 상호 연결망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서 21세기 세계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계사적 변화 흐름을 지칭하는 '패러다임'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진전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화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 '지방의 국제화'라고 부를 수도 있다. 지방의 국제화 전략은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방의 생존 및 발전 전략으로 요청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교류·협력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21 세기의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관계의 개선 및 평화정착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전략은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 이미지에 입각한 남북대화 및 국제교류·협력의 거점화를 통해 제주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 시키기과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의 비전 설정 전략인 동시에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이다.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의 자유와 경제활동에 대한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지역으로 개발함으로써 고부가 첨단산업을 육성할 뿐만 아니라 관광·물류·금융 자유화 기능이 결합된 선진 생활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평화의 섬' 전략은 이미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¹⁾ 그 지정 및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작업에 돌입하고 있으나,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아직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올해 내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

*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법학부 교수

1) 「제주도개발특별법」 제 52조 참조.

2)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면,

① 대통령계 국제자유도시 기본구상(안) 보고('99. 3. 15).

② Jones Lang LaSalle사(미국)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연구용역 시행('99. 9. ~ 2000. 6.).

이러한 배경 하에 본고는 남북교류·협력시대를 맞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의 관련성을 '세계평화의 섬' 전략과 관련하여 논하고자 한다.

II.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의 기본방향 및 의의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기본원칙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첫째, 지속 가능한 개발, 둘째, 인간중심의 개발, 셋째, 지역문화를 보전하는 개발, 그리고 넷째,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을 그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³⁾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따라,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적 측면에서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친환경적인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인간중심 개발의 원칙'에 따라, 인간의 가치와 삶의 질을 증시하는 지식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측면, 기반산업 측면, 교육·인적자원 측면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변화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을 육성하며, 나아가서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역문화를 보전하는 개발 원칙'에 따라, 제주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며, 문화유산이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제주 고유의 문화와 유적지의 보존에 힘쓴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개발 원칙'에 따라,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발방식을 추구하고, 주민의식과 행태도 세계화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기본방향

외국의 국제자유도시와 차별화된 제주형의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제주의 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관광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되, 첨단산업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며 1차 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결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경제기반 확립한다. 특히 농업·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 교육·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며 첨

③ 건설교통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지원단」 설치(2001. 1. 31.).

④ 국가적 전략사업으로의 추진을 위한 새천년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 발족(2001. 2. 21) 그리고 향후 추진 방향은.

① 국무총리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설치

②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

③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의원입법 추진)

④ 개발전담기구인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JIIDA) 설립 및 계획의 시행 등의 순서로 예정되어 있다.

3) 새천년민주당(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안)」, 2001. 7. pp.4~5 참조.

단지식산업 단지 조성으로 지식기반 경제를 지향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전문 기술·서비스 인력의 유치 및 교육기반의 확충에 힘쓴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물류와 금융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의 성장을 추진한다. 고부가가치의 항공물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항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고 역외금융센터를 조성하며 국제금융기관 등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 금융시장의 발전을 추진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전략의 핵심요소로서 교육 분야를 설정하고, 제주를 학문과 첨단산업 및 기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의 환경에 알맞게 교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⁴⁾

3.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의 의의

국제화/세계화/지방화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국제교류는 사람·상품·자본·정보가 국경을 넘나드는 쌍방향의 흐름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의 도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들과 단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각국의 자치단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필요한 문화, 정보, 자료, 인력, 자원 등을 서로 교환하거나 교류함으로써 상호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또한 지역의 활성화를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제주를 사람·상품·자본 이동의 자유와 기업활동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는 곧 제주의 '국제교류 활성화 전략'이자 '국제화/세계화' 전략에 해당되는 것이다. 제주도의 국제화/세계화란 제주도를 세계 속에 편입시켜 동질화시킨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세계화의 흐름과 압박 속에서 제주도가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화는 제주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창의성에 토대를 두어야 하며, 타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기초로 지속적인 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대외 교류·협력 방안으로 구체화되어짐으로써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남북 교류·협력 시대의 전개와 제주의 역할

1. 남북 교류·협력 시대의 전개

2000년 6월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5개항⁵⁾의 공동선언, 즉 「6·15 남

4) 상계서, pp.5~6, p.17 참조.

5) 이 5개항의 핵심적 내용은 첫째, 남과 북에 의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둘째, 상호 통일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의 통일 지향, 셋째, 올해 8·15에 즈음한 가족, 친척 방문단 교환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의 해결, 넷째, 남북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추구 및 협력과 교류의 다양화 추진, 다섯째, 합의사항 실천 및 당국간 대화 추진 등이다.

북공동선언'이 합의·발표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분단 이후 55년만에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남·북의 최고 당국자가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남북한 정상은 남북대화와 협력만이 분단의 심화를 막고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결과 갈등으로 점철된 남북관계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다.⁶⁾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통일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8·15에 즈음한 이산가족 친척방문단 교환,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당국간 대화의 조속한 개최 등에 합의하였다. 남북한은 이제 성실과 신의에 입각해 이들 합의사항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다.⁷⁾ 「6·15 남북공동선언」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한 총리에 의하여 서명되는 등 그 이전의 남북간 합의가 정상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되었던 것임에 비하여 남북한 양측 정상이 직접 서명을 한 정상간 합의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⁸⁾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는 한반도에 있어서 동서 냉전의 잔재를 일소시키고 남북 통일의 가능성을 높여 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 나갈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및 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계속함은 물론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교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경제협력을 위한 당국자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경협 4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바 있다. 경의선 철도의 복원 사업이 남한에 의하여 이미 시작되고 군사 당국자간의 회담도 이루어지는 등, 남과 북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넘어서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기 시작하였다.

근래에 들어와서 남북관계는 대내·외적 변수에 의하여 소강상태를 보여 왔으나, 최근 북한에서 다시 당국간 회담 재개를 요청하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⁹⁾ 어쨌든 지금

6) 최성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및 교류 방안.”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관계 발전방안」, (2000년도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하계 워크샵 자료집), 2000. 8. 20. pp.59-60 참조.

7) 「동아일보」, 2000. 6. 14 참조.

8) 「7·4 남북공동성명」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대전제를 만들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1991년 12월 13일에 작성된 「남북기본합의서」는 교류와 협력, 평화를 위한 불가침, 정치적 신뢰회복 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였지만 각 부문별 공동위원회 가동에 실패함으로써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6·15 남북공동선언」은 두 정상이 서명 당사자여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9)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북한이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북한이 변화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은 주로 경제 수준 내지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을 보고 있으며,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대체로 체제 수준 내지 정치·군사적 측면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이 그 동안 당위적 차원에서 제시되어 왔던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보다 현실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다. 남한의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협력 및 교류 중심주의와 북한의 민족대단결·자주·통일의 추상적 입장이 위태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쨌든 남북이 갈등·대립·대결의 시대를 벗어나 相生의 ‘어려운’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채완, “북한은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민주평통」, 2000. 12. 15. 8면; 고성준, “남북 화해·협력 시대와 ‘평화의 섬’ 제주.”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평화의 섬’ 구상과 초등통일교육」,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12. 14. p.15 참조.

까지의 남북관계 개선의 기초를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2.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주의 역할

남북 화해·협력 및 교류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제주도가 수행하도록 기대되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제주는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을 보여 왔던 남북의 당국 사이에 대화와 교류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남과 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나아가서 남북통일을 앞당기도록 하는 데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제주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분쟁해결센터 또는 평화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소로 활용됨으로써 지역적 평화체제를 창설하거나 유지·강화하는 '동북아' 내지 '남·북' 평화센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제주는 이산가족 상봉 및 관광·통상교류 등 남북 민간교류·협력의 주무대가 됨으로써 남북한의 '동질성'(identity)과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사회통합의 핵심적 목표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 남북한 사회통합은 경제적·문화적·인적 교류 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IV.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의 평화적 함의

1. '평화의 섬' 구상의 전략적 의의

지역의 평화·발전 전략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평화의 개념을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제주 발전 전략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세계평화의 섬' 구상은 장기적으로 제주인의 삶과 제주 발전의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평화가 의미하는 대립과 갈등이 없는 상태는 달리 표현하면 주체간의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제주 '세계평화의 섬'은 제주로 하여금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과 중앙 그리고 세계의 조화를 통한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도민간의 갈등과 대립이 극복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는 복지공

10) 김부찬, "남북교류·협력과 제주 '평화의 섬,'" 『제주발전연구』, 제4호, 제주발전연구원, 2000, pp.44~45 참조.

11) 사회통합이란 "양쪽 체제가 상호의존적 일관성을 갖게 되고, 남북한 지역의 주민들이 동류의식을 형성하여 합일된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통일'(unification)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사회통합은 "사회의 모든 구성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과정 혹은 그 전체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배규한,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와 전망," 『6·15 선언 이후의 남북한 관계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12, 9, pp.24-25 참조.

동체로 조성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주가 추구하는 발전 이념과 상통하는 것이다.

둘째, '세계평화의 섬' 구상은 제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평화 이미지에 입각한 국제교류·협력의 거점화를 통해 제주의 위상을 세계에 각인시키고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제주는 국제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지역 평화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스스로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조화시키고 이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계평화의 섬'의 기초가 되는 평화의 개념은 이념적·내부적 측면에서는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이 없는 조화로움이 실현되는 상태로 정의될 수 있고, 전략적·대외적 측면에서는 지방화·세계화 시대에 지역간 국제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평화적 존립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¹²⁾

2.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의 개념적 연계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제주도를 21세기 동북아의 경제 주도권의 선점을 위한 세계화의 전진기지로서 조성하고,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지역으로 개발하며, 나아가서 남북협력 및 국제교류를 연계하는 '세계평화의 섬'의 이미지와 위상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평화의 섬' 전략과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궁극적으로 제주도를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공동체'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제주의 특성을 살려 우선적으로 국제 '관광자유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평화의 섬' 이미지와 실천 전략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방향과 밀접·불가분의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제주도가 '평화의 섬'의 이미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념적으로 보면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평화의 섬'의 완성을 지향하는 수단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게 된다.¹³⁾

'9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일본 오키나와의 '국제도시 형성 구상'을 보면 '평화·공존·자립'을 기본 이념으로 삼아 자유무역지대 확충, 국제정보·금융도시 건설, 국제컨벤션 유치와 관광리조트 건설, 그리고 오키나와 교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사람·물자·금융·정보의 교류거점으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평화', '국제교류',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를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키나와 국제도시 구상은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구상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본다.

12) 김부찬, 전개논문, pp.36~37 참조.

13) 고성준 교수는 '평화의 섬'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를 구상해야 한다고 한다. 고성준, "남북화해·협력 시대와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 『제주발전연구』, 제4호, pp.16~17, 21~30 참조.

14) 상계 논문, pp.19~21: 오키나와의 '국제도시' 구상은 그 역사성과 문화성에 바탕을 두고, 「류큐왕국 대교역 시대 역사성 정립과 자존의 확립 → 오키나와 전쟁의 비극 진실규명을 통한 평화에의 기원과 평화지역화 → 평화의 세계적 전파를 위한 국제교류로의 확장 → 국제도시 형성구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개별정책들을 통합하여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국제도시라는 큰 틀을 이루어나가도록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현경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건: 친환경적인 '제주형'으로 추진돼야," 제주평화포럼 발표논문, 2001. 6. 17. 참조.

3.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모형의 전략적 통합¹⁵⁾

현재 제주도와 중앙 정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는 정부 차원의 지원 조직이 구성되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화의 섬' 구상과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모두 제주의 미래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이미지와 비전을 통합하고 발전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평화의 섬' 계획과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전략적으로 연계 또는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 및 추진에 있어서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반영할 수 있는 경제적 접근 모형을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문가 조사에 의하면,¹⁶⁾ 제주 '세계평화의 섬' 구상은 '경제특구화'(국제자유도시화) 모형, '국제 교류·협력 거점화' 모형, 그리고 '평화지대화' 모형이 복합적으로 추가되면서 단계적 또는 통합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통합적 실천과정이 궁극적으로 제주를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별법의 '세계평화의 섬' 조항을 보완하고 시행령의 제정을 통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한반도 평화정착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화

1. 국제교류·협력거점화

제주 세계평화의 섬 전략과 관련하여 제주도를 평화에 관한 학술 연구 및 논의의 중심이 되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국제회의나 회담의 장소로 발전시켜 나갈으로써 제주도를 국제평화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특화 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핵심적 과제로서 국제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제주도를 관광 및 국제 비즈니스를 위한 기반시설이 충족되는 국제적 관광·상업 도시인 동시에 국제적 교류·협력을 위한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난 '97년 제주도가 중심이 되어 중국의 하이난 성, 인도네시아의 발리 주, 일본의 오키나와 현이 참여하는 다자간 관광협력체인 '섬 관광정책 포럼'(ITOP Forum)이 창설되었다. 이는 각 참여 지역의 도서 지역으로서의 공통점 및 다양성을 기초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강화함으로써 상호간 '관광 진흥'과 '교류·협력'의 증진이라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주도로 창설된 것이다. 제주도로서는 이러한 ITOP Forum을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나아가서 그 참가 범위를 확대하

15) 김부찬, "평화의 섬 선포를 위한 모델의 설정 및 법·제도적 검토," 『제주 평화의 섬 모델과 추진전략 모색』(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워크숍 자료), 1998. pp.33~39, 42-45.

16)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방안』, 2000. pp.35~40 참조.

여 북한지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나 나아가서 아시아·태평양의 자치단체들로 구성된 '동북아' 또는 '아·태' 자치단체협의회(가칭)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3조는 “제주도는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체육·환경·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교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가 '평화의 섬' 이미지를 바탕으로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제주도의 국제교류 및 협력의 대상 지자체나 도시로서 이제는 북한 지역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 지자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학술교류 및 예술단 교화 등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천전략과 추진일정을 치밀하게 수립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

2. 남북대화·교류센터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제주 지역이 평화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함은 물론 남북의 교류·협력 및 제주 지역의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감귤 보내기, 씨감자 보내기와 같은 민간 차원의 경제 교류·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그리고 백두산-금강산-한라산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 설치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남북교류·협력 센터화'를 통하여 제주도는 단순한 관광지로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및 신뢰 구축을 위한 평화회담 장소로서,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장관회담과 장관급 회담이 제주에서 개최되고 북한측의 교차 관광이 예정되는 등 제주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 급격히 부상하고, 이 때문에 제주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근래 들어 남북대화가 정체 상태를 보이면서 남북대화 및 교류의 장으로서의 제주도의 역할이 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 제주도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외부적 변수, 즉 국제적 환경과 특히 북한의 태도 변화에 의해 언제든지 남북 대화의 중심지로서의 제주의 역할이 퇴색될 수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내·외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남북 대화 및 교류의 장소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도가 남북관계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통일 과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¹⁷⁾

통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국자들간의 정치·군사적 회담이나 경제협력 이상으로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지역 민간단체에 의한 대북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¹⁸⁾ 대학의 경우도 북한지역 대

17) 이와 관련하여 양길현 교수가 제안한 제주도의 '第3首都論'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3수도론'에 대해서는 양길현, "남북한 화해·협력과 제주도," 「6·15 선언 이후의 남북한 관계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pp.13~15 참조.

18) 이에 관해서는 권영호, "남북교류와 민간통일운동의 현황과 과제," 임문철, "직접 본 북한사회와 시민 통일운동," 문영희, "민간통일운동 방안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개교 48주년 기념 통일문제 세미나」(제주대학

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교류가 보다 확산되고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할 것이다.

3. '제주 세계평화재단'의 설립 등 추진조직의 강화

현재 제주도에서 국제교류 및 협력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대·보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담당 부서인 '교류협력계'의 인력을 보강하고 그 전문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한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제주 국제화추진본부'로 역할을 전환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작업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⁹⁾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장이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등 조직강화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 내에 중앙정부의 '세계평화의 섬' 지정을 유도하고 '평화의 섬' 조성을 전담할 '제주 평화의 섬 추진기획단'을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 '제주 평화의 섬 추진기획단'은 국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논리를 개발하며, 평화의 섬 지정 후에는 구체적인 관련 사업을 위한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민관협력형 '제주 세계평화의 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남북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 지원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치·운영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고 국제교류를 활성화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평화 사상 및 평화 운동에 대한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정책 개발·기획·조정·지원 등 집행적 기능을 전담할 조직으로서 '제주 세계평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이는 '남북평화센터'나 '국제평화연구소'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는 것이다.

'제주 세계평화재단'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와 연구의 중심이 되어 이를 평화운동 및 실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제주 세계평화재단'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사상 및 이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둘째, 평화운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기초로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다. 셋째,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구축을 위한 평화 회의, 군비통제 및 축소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 넷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주도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다섯째, 평화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평화운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조직하며 평화 관련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안한다.

4. 국제회의 산업의 활성화: 평화회의 신설 및 유치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대외에 각인되기 위해서는 평화 관련 국제회의를 신설·개최하거나 관

교 동아시아연구소 세미나자료집), 2000. 5. 26: 김영래, "남북화해 시대와 시민사회의 역할,"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관계 발전방안」, pp.97~113 참조.

19)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JIIDA)가 설립된 이후 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를 국제화추진본부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런 국제회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남북이 포함된 동북아 평화회의 및 안보관련 회의를 제주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제주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간 조직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조직위원회'를 결성하여 제주도 에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 조직위원회로 하여금 6개국(2+4: 남한정부와 북한정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간 한반도 평화회의체의 결성 및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²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주도가 남북통일에 기여하고 명실상부한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국제적 이해 및 협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접근 방법이라고 본다.

제주도로서는 지난 6월 개최했던 '제주평화포럼'(Jeu Peace Forum)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정례적 개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주평화포럼은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남북한 화해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공존공영에 공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개최되었다. 제주평화포럼은 제주도를 평화의 섬, 자유의 섬, 번영의 섬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제주지역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감과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다.

제주평화포럼의 정례화를 통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주요 정상들이 제주포럼에서 논의했던 냉전종식과 화해·협력의 정신을 한반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평화포럼에서 합의된 선언문을 기초로 '남북평화센터'를 창설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평화포럼의 지속적 개최를 통하여 국내·외 참여 인사들의 인적 네트워크(human network)를 형성함으로써 이들을 '세계평화의 섬' 추진을 위한 인적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또한 중앙정부의 제주도에 대한 관심 제고에 따라 평화의 섬 조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남북평화센터'는 한반도 평화정착 및 세계평화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고 관련 세계평화기구 및 평화연구기관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위상과 역량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 동북아 경제협력권 구축: 선형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궁극적으로 제주 지역을 동북아 지역의 관광교류는 물론 경제·통상 교류의 거점(hub)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통하여 제주에 설치되어질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는 제주 지역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일본과 중국, 나아가서 북한의 개방도시 또는 경제특구들²¹⁾과의 線形自由貿易地帶(linear free trade zone 또는 linear free trade belt) 창설을 위한 기초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형자유무역지대'는 지리적으로는 국지적 통합의 성격을 가지며 기능적으로는 전면적 통합에 대칭

20) 고창훈, "평화섬 정책의 준거틀과 실천논리." 동아시아연구소 등 제주대학교 5개연구소 공동주최 「섬과 대륙의 공영」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 2000. 10. 14. 발표논문 참조.

21) 북한도 경제회생을 위해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91년 이후 대외개방을 위한 경제특구의 확대 및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조치를 취해 왔다. 현재 나진·선봉 외에 금강산 관광특구, 개성공단, 신의주, 남포, 원산 등에 경제특구를 설치했거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0. 12. 26 참조.

되는 부분적 통합의 성격을 갖는 국제적 경제통합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즉 선형자유무역지대란 각국의 경제적 국경(관세 영역) 내에서 대외개방과 대외협력을 자유로이 행할 수 있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이들 특정지역 상호간에 제한된 산업 혹은 제한된 품목에 한하여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형태의 자유무역권을 의미한다.²²⁾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선형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즉 각국은 자기 자국 내에서 하나 이상의 개방도시 또는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이 도시를 중심으로 대외무역 및 대외 경제협력 창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이러한 창구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개방 지역 내에 보세가공구역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거나 자유무역항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의 무역자유화 방식은 동북아 지역이 안고 있는 체제적, 구조적인 무역 장벽을 극복하면서 역내 제국 상호간 경제의 유기적 결속을 실현하고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국민 경제의 일부만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개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보다는 거점간 또는 선형 자유무역지대를 결성하는 것이 경제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지역적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형태라고 본다.²³⁾

6. 국제화 능력의 제고 및 평화/국제화 의식의 제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불가피하게 개방화, 다원화, 그리고 상호의존성의 심화를 초래하게 된다. 국제화 전략은 지방과 지방주민들의 '경쟁력'과 '포용력'을 요구한다. 특히 세계화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지방 스스로가 자율적인 국제관계 및 국제협력의 주체로서 활동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인 모두가 스스로 문화적 다양성과 평화적 공존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국제화 의식을 제고해 나가야만 한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도민 모두가 의식과 사고를 개방적·적극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스스로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국제화/세계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은 관광·투자·경제 활동을 위하여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상담하면서 이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데 필요한 국제적 매너와 정보활용 및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화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은 하나의 가치나 문화 척도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가치

22) 동북아 지역의 경우 이러한 자유무역권의 대상 지역은 각국의 연안 지방에 위치한 경제특구 또는 개방(자유)도시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방도시를 하나의 자유무역지역으로 결합할 경우 이는 국민경제의 시장 영역을 평면적으로 결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點으로 표시되는 개방도시를 상호 연결하는 線 모양의 자유무역권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유무역권은 面의 개념을 갖는 地域(area)이 아니라 띠의 개념을 갖는 지대(zone 또는 belt)로 나타날 것이므로 이를 선형자유무역지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손병해,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을 위한 선형자유무역지대 구상과 그 기대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pp. 47-48 참조.

23) 상계서, p.52: '선형자유무역지대'의 變形으로서 '선형관광자유지대'(linear free tourism area)의 창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 남북한만을 생각할 때, 제주도 한라산과 북한의 금강산 등이 '남북관광교류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전체로 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광교류특구'에 대해서는 오상훈, 「남북관광교류협력과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주발전연구』, 제4호, p.66 참조.

관이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원주의와 관용·평화의 정신을 내면화해야만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교육기관, 그리고 민간·사회단체들로 하여금 평화교육 및 복한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평화운동과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평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의,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갈등의 비폭력적 해소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가치인 평화를 지키고(peace keeping), 만들어 내며(peace making), 더욱 증진시키는(peace improving),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평화교육은 나아가서 복한을 바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물론 사회 교육 현장에서 제주 '세계평화의 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교육함으로써 학생들과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비폭력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 하며, 마음속에 내적 평화의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관용, 동정심, 공유, 배려의 자질을 확고히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국제 차원의 평등의식과 연대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인이 남북 화해와 국제 평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문화적 토대를 마련해야만 한다.

VI. 결 론

근래 들어 다소간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해 6월에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립·갈등의 관계로부터 교류·협력 관계로 급진전되어 왔다. 제주도에서도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측의 교차관광이 천명되는 등, 제주 지역이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의 주무대로 각광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남북 교류 및 협력 시대의 전개와 관련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가 한반도 및 세계 평화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제주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와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의 국민관광지로서 개발되어 온 잠재력을 활용하여 스스로를 '관광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고, 나아가서 물류·금융산업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금융무역기능이 결합된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로의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전략은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및 역할 수행과 연계하여 국제교류·협력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번영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이다.

'세계평화의 섬' 구상과 '국제자유도시' 구상은 모두 제주의 미래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이미지와 비전을 통합하고 발전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과 '국제자유도시' 구상을 전략적으로 연계·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법·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제주도를 남북 대화 및 교차관광 등 인적 교류의 장으로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의 감갈 보내기 운동을 상호주의적 경제협력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남북간의 인적·경제적 교류·협력 사

24)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한울아카데미, 2000, p.61 참조.

업의 활성화 및 동북아 경제협력권 구축을 통하여 민족통합과 남북통일은 물론 동북아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번영의 거점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고,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집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은 단순히 법·제도의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정부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더불어 도민들의 능력 제고와 공감대 형성도 무엇보다 필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민들에 의하여 이러한 발전전략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도민들의 국제화/세계화 의식과 미래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토대로 국제자유도시와 평화의 섬 전략이 실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대 사회과학연구소·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6·15 선언 이후의 남북한 관계와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12.
- 새천년민주당(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안)」, 2000. 7.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관계 발전방안」(2000년도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하계 워크숍 자료집), 2000. 8.
- 제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남북화해협력시대의 평화의 섬 구상과 초등통일교육」(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12.
- 제주국제협의회, 「평화와 번영의 제주」, 신라출판사, 1993.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학술세미나 자료집), 1999.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 평화협력체제와 제주의 평화의 섬 구상」(연구보고서), 1997.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제주 평화의 섬 모델과 추진전략 모색」(워크숍 자료집), 1998.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개교 48주년 기념 통일문제 세미나 자료집」, 2000. 5.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21세기 통일번영의 시대와 제주도」(연구포럼 자료집), 2000. 2.
- 제주대 동아시아연구소, 「남북교류협력에 따른 제주지역 발전방안 조사보고서」, 2000.
- 제주도,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0. 6.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상황 보고」, 2001. 7.
- 제주도, 「제2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안)」, 2001. 8.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형 평화의 섬 모형정립과 실천방안」(정책연구 2000-10) 2000.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 제4호, 2000.
- 제주발전연구원·제주방송인클럽, 「제주 평화의 섬 지정 어떻게 할 것인가?」(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10.
- 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학술세미나 자료집), 2000. 9.